

‘서울인구 절반’, 500만명 확진 ‘정점’ 더 ↑

누적 500만명대...국민 10명 중 1명꼴 감염 400만명 돌파 까지 4일...짧아진 확진 기간

9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만2446명 늘어나면서 확진 규모가 당초 방역 당국이 예상했던 정점인 '최대 35만명'에 임박했다. 누적 확진자는 5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민 10명 중 1명, 서울인구의 절반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를 살펴보면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 20만2721명 대비 13만9725명(68.9%) 폭증한 34만244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19만8800명→3월4일 26만6849명→3월5일 25만4327명→3월6일 24만3626명→3월7일 21만716명→3월8일 20만2721명으로 20만명대 안팎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일인 3월9일 34만2446명으로 처음 30만명대로 급증했다.

평일인 월·화요일 검사량이 반영된 수요일 확진자가 폭증하는 양상이 이번주도 이어졌다. 1주 전에도 화요일인 3월1일 13만8990명 수준이었으나 수요일인 2일 21만8990명으로 7만명 가량 급증한 바 있다.

최근 4주간 수요일 기준 확진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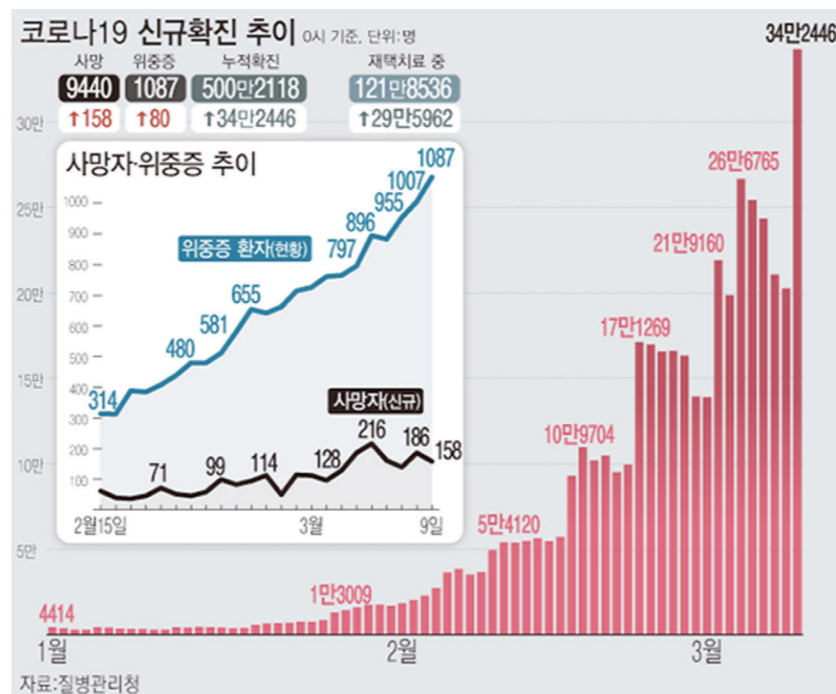
를 비교해보면 1주 전인 2월9일 4만948명 대비 8.4배, 같은달 16일 9만439명 대비 3.8배, 같은달 23일 17만1450명 대비 2배, 3월2일 21만9228명 대비 1.6배 증가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8일 이달 중순 최대 3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지난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확진자 동거인 격리 면제에 이어 5일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점 시기는 당겨지고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방역 완화로 인해 정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3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처음 500만명을 넘어선 521만2118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2021년 12월 기준 5131만7389명) 대비 10.2%, 즉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셈이다.

지난 1월24일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화됨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유입 이후 지난 2월6일 누적 100만명이 되기까지 748일이 걸렸고, 같은 달 21일 누적 200만명대까지 15일, 2월28일 누적 300만명대까지 7일, 지난 5일 누적 400만명까지 5일, 나흘만인 9일 500만명대를 넘었다. 총 779일 만에 500만명대를 넘어선 상황이다.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1087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일주일간 위중증 환자 수는 평균 799명으로, 1주 전 583명 대비 216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58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사망자 수는 167.7명이다. 1주 전 94명보다 73.7% 늘어난 것이다.

재택치료자 수는 처음으로 12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날 재택치료 환자는 모두 121만8536명으로, 이 중 18만5104명(15.2%)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도 103만343명으로 처음 100만명대로 올라섰다.

김재환기자



화순소방, 차량화재 소화기로 자체진화

화순소방서(서장 이종희)는 지난 6일에 화순읍 향청리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차량 소화기를 활용하여 자체진화를 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무안소방,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 막아

무안소방서는 4일 일로읍 월암리 소재 주택에서 음식물 탄화 화재가 발생했지만 설치된 화재 경보기 작동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남부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안전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동부소방, 무등산국립공원과 중요문화재 등 선제적 대응

광주동부소방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위험경보 해제 시까지 무등산국립공원과 공원 내 중요문화재 및 주요탐방로에 1일 2회 예비주수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최이슬기자



담양경찰, 교통신호등 연동화로 주행흐름 개선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국도13호선인 담양군 대전면 중육교차로에서 담양읍 양각교차로 구간(11km)을 교통신호기 연동사업을 실시하여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였다.

담양=박중영기자



순천경찰, CCTV설치 등 치안인프라 조성 위한 관계기관 협의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최근 CCTV설치 등 치안인프라 조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해룡산업단지 조성 협의체 등과 CCTV설치 등 치안인프라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대통령 선거일 경북궁 찾은 어린이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어린이들이 놀이장을 즐기고 있다.

근로환경 개선했지만...코로나에 '불안감·우울증'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환경조사' 결과 발표

노동시간·강도 등 일하는 사람의 근로환경이 최근 3년새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우울증을 겪는 등 건강 상태도 악화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환경 조사는 유해·위험요인 노출, 노동시간·강도 등 다양한 노동환경 조사를 위해 만 15세 이상 취업자 약 5만명(가구당 1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결과 근무시간 4분의 1 이상이 진동이나 소음 등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됐다는 응답자 비중은 13개 요인에서 2017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진동 24→23% ▲소음 21→15% ▲고온 24→15% ▲간접흡연 13→5% ▲통증유발 자세 51→38% 등이다.

주52시간 이상 근무(21%→13%)하거나 야간과 주말에 일하는(51%→43%) 비중도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연구원은 "이는 주52시간제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나머지 조사 항목인 업무소통이나 직업에 대한 전망, 주관적 건강 상태는 상대적으로 악화했다. 업무에 있어 동료의 도움(69%→60%)이나 상사의 지지(64%→58%)를 받았다는 응답은 감소했다.

언어 폭력(4.8%→5.4%)과 성희롱(0.2%→0.4%) 등을 겪었다는 비중도 소폭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직업에 대한 전망의 경우 긍정적 평가(40%→35%)는 다소 감소하고, 6개월 내 실직에 대한 우려(10%→12%)는 소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관적 건강 상태를 '좋은 편'(73%→69%)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줄었다. 대신 두통, 피로, 불안감,

수면장애 등 건강 상태 문항에 부정적 응답이 대체로 증가했다. 관련 지표인 'WHO-5 웰빙 지수'(59점→57점)도 떨어졌다.

특히 일자리 전망의 경우 임금 근로자보다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일용직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도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았다.

연구원은 "이 부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3년 7차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노동환경 변화를 면밀히 추적·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취업자 5만538명이 참여했다. 자영업자 1만271명, 상용·임시·일용직 등 임금 근로자 3만8518명, 무급가족종사자 1749명이다.

통상 근로환경조사는 6월부터 10월까지 가구 방문을 통해 진행되지만,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2차례 중단되면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개월간 진행됐다.

이슬비기자

새만금, '굴착기 전도 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가 해당 법령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3분께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졌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A(68)씨는 작업 중 이동하다가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석이 물에 잠겼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거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장에서 사고원인과 원형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토목공사는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관련 사건을 담당 받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만간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서선욱기자